

제주특별법 개정안 핵심과제 ‘異見’

제주도·도의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진통 예상
‘도의원, 정부부지사·행정시장 겸직 허용’ 이견
행정시장·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놓고도 팽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핵심 과제를 놓고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안 도출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110개의 세부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12일까지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세부 핵심 과제에는 제주도의원 공직 겸직 특례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이 들어가 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정부부처 장관이나 총리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부서와 행정시장,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는 도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정치인인 도의원이 공무원 신분이 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복종의 의무가 상실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또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대상은 정부부서와 감사위원장으로 한정돼 있다.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근거 없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의 협약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유발했고 이에 제주도의회는 이들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핵심 과제를 놓고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안 도출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의 공직 겸직 허용에 대해서는 의회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합의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에 제주도의 의견이 제출되면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만큼 4월까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최종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대윤기자 bigroad@ihalla.com



숫노루들의 서열 싸움 8일 제주시 중산간 지역에서 숫노루들이 목숨을 건 치열한 서열 싸움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크루즈 관광산업 폐업 위기

코로나19 여파 지난해 크루즈 제주입항 전무
올해도 342회 입항 계획 있지만 취소 이어져

제주크루즈 관광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크루즈선 입항 현황은 2015년 285회·62만2068명, 2016년 507회·120만9106명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인 2017년에는 98회·18만9732명을 기록한데 이어 2018년에는 20회·2만1703명으로 급감했다. 2019년에는 27회·3만7714명으로 소폭 증가하며 회복을 기대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예정된 크루즈 입항 계획이 전면 취소되면서 ‘0건’을 기록,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 올해에도 도내 크루즈 입항 계획은 342회로 예정돼 있으나 이마저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의 운영에 따른 적자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에는 1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도내 크루즈 수요가 급감하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9억원

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다 2019년에는 13억5000만원, 지난해에는 1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2017년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준공·개장한 이후 수년째 개점휴업 상태였던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은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을 임시 중단했다.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의 운영 예산 중 60~70%가 용역비(보안·청소 등)에 투입되는데, 크루즈 입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용역비를 아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의 개장이후 크루즈선 입항 현황은 2017년 0건, 2019년 2건, 2020년 0건 등 단 2건이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계획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감염병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내 제주 크루즈 관광산업의 회복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크루즈 여행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하고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크루즈 관광 마케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제주와미래연구원·한라일보 공동기획 / 脫 플라스틱

“친환경 경영은 세계적 흐름 제주기업 환경보전 노력 필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친환경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관련기사 7면

제주와미래연구원과 한라일보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삼다수의 탈(脫) 플라스틱 도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경구 제주개발공사 품질연구본부장과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친환경

경영이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플라스틱 페트병을 수거하고, 대체 소재를 찾아 개발하는 등 제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개발공사는 생산부터 수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친환경 사업 모델인 ‘그린 홀 프로세스’ 경영을 본격화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사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50% 절감을 목표로 무라벨 생수 출시 이후 재생 페트 사용, 바이오 페트 개발 연구 등 단계별 로드맵 구축에 착

수한다. 강경구 본부장은 “2025년까지는 판매된 삼다수 페트병을 전량 회수할 계획”이라며 “도민을 위한 기업인 만큼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검토해 친환경 흐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정도 국장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 1위가 삼다수 페트병으로 나왔다. 버린 사람의 문체도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환경교육 내실화’ 조례 개정 추진

제주지역 학교에서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환경교육을 기후 위기·에너지·물·생태·산림·해양환경을 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교원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연구, 각종 관련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맞춤형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코로나19와 지구온난화 등 각종 위기로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환경역량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SINCE 1989
한라일보 32주년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제주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시선으로
제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갑니다

한결같이 독자와 제주도민의 큰 믿음과 신뢰를 받아온
뜻 깊은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와 도전 속에 제주 미래를 힘껏 이끌어 나갈
제주의 대표신문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길 기대합니다.

여성기업
DESIGN leader
JEJU 디자인리더 제주